"朴대통령, 아버지가 만든 주력산업 다 까먹고 있다"

추미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서민·중산층 중심 경제 패러다임
법인세 정상화가 첫 걸음
민생경제 살리기 대기업 동참 호소
사드·대북·외교 정책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6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민생 경제'였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을 비롯한 인사 난맥상과 검찰개혁·개헌 등 정치현안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성장 패러다임 바꿔야**=추 대표는 "우리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우리 당은 지속해서 경계·공습경보를 울렸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지난 8년간 방치만 하다가 심각한 비상경제 위기에 처하게 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추 대표는 수출 중심의 낡은 성장전략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은 아버지가 만든 주력산업을 다 까먹고 있다. 아버지가 일군 과거 경제정책에 의존하고 그 시대의 성공 신화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배의 공정성도 지적했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서민과 중산층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해법으로 추 대표가 제시한 것은 '임금과 조세개혁'이다. 그는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정상화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된다"며 "일한 만큼 받는 임금이 민생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세개혁과 관련, "더는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국민이 채울 여력이 없다"며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 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담판 제안**=추 대표는 "민생보다 정치가 앞설 수는 없다"며 민생 경제에 대한 대통령과의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정치 지도자로서 정쟁을 하는 대신 국민에게 가장 절실한 민생을 위해 대화를 나누자는 제안으로, 이후 대정부 관계나 대여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애초 원고에는 '영수회담'이라고 썼지만, 실제 연설에서 용어를 '대통령과의 긴급회동'으로 바꿨다. 자칫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는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양측 모두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굳이 단독 만남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 동참 호소**=추 대표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 삶이 만신창이다. 정부는 법인세 문제를 수년 봉쇄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노동한 만큼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되는 등 국민 희생으로 기업이 번성한 만큼 지금은 대기업이 나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안보정책 비판**=추 대표는 "핵과 미사일은 평화와 생존, 체제유지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북한에 경고장을 날리는 동시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강풍정책으로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됐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도 비판했다.

특히 추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계획을 거론하며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의 낡은 안보관이 문제다. 안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안보를 이유로 국민을 이념으로 분열시키는 게 바로 낡은 안보관"이라고 일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잘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여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 "민생경제 지적 존중…비판 겸허히 수용" 이례적 높은 평가

"선의의 경쟁으로 큰 정치 하자"
모처럼만에 성숙한 자세 보여

6일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새누리당이 "민생경제에 집중한 연설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호평을 받고 있다. 그동안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이뤄진 상대 당 대표 연설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상생보다는 정쟁의 시작을 알려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연설을 두고 야당들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망각한 후안무치한 연설(더민주)', '청와대가 대신 써준 연설(국민의당)'이라는 등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정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사과하고 호남을 차별한데 대해 참회한다고 밝힌 것까지 '정치적 수사', '일회성 이벤트' 등으로 평가 절하했다.

반면,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법인세 정상화 요구도 기업과 국민의 상생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제의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력의 의지만 있다면 능히 그 타협점을 찾아 국회가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도 야당도 변해서 선의의 경쟁으로 도량이 큰 정치를 함께 펼쳐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분하게 야당으로는 할 수 있는 말과 참고 될 만한 말을 했다"고 평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새누리당부터 상대 당을 존중하는 정치문화, 화합과 협치의 여건을 마련해 나가자"며 "연설 중 야유나 고함은 일절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상대 당 대표 연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더민주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인 것 같다"며 "야당도 일방적 비판보다는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자세를 보여야 민심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정현 대표 이희호 여사 예방…"김대중 前대통령 IMF 극복 항상 감사"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지난 5일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호남 차별을 사과하고 호남과의 연대를 제안한데 이어 6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는 등 서진(西進)의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마포구 김대중도서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여사를 만나 "김 전 대통령이 IMF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빠르게 극복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초보 야당이어서 그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야당 역할인 줄 알았다는 게 아쉽다"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김 전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싶어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잘 도와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이 여사는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 양보하며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좋은 업적을 남겨줬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하겠다"고 답했다.

이 여사는 또 지난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고 이 대표는 "정치권이 정신 차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여사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예방에 앞서 여당 대표를 먼저 보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며 이 대표는 "국가의 어른으로서 초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서별관회의 청문회 예정대로 8~9일 열릴 듯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 날짜 연기를 주장해온 국민의당이 애초 계획된대로 오는 8~9일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수용키로 했다. 더민주도 이에 크게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청문회는 예정대로 8일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 부실 청문회가 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마냥 청문회 연기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8~9일 정상적으로 청문회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청문회 준비 기간이 촉박해 상당히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해 의혹을 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민주도 8~9일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청문회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변화가 없다"며 "그러나 날짜 문제 때문에 전체 청문회를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